

마르크스와 프랑크푸르트學派： 자본축적과 국가의 관계를 중심으로

韓 相 震
(서울大 社會大 教授)

서 론	〈차 례〉
I. 마르크스의 사회이론	II. 하버마스의 마르크스 비판
(1) 정치경제학 비판	(1) 자본주의경제와 국가
(2) 자본주의경제의 자율성	(2) 자본주의국가의 기본성격
(3) 원시축적과 국가의 역할	(3) 해방적 실천의 인식론적 기반
(4) 자본주의국가의 기본성격	(5) 국가소멸과 해방적 실천

서 론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헤겔, 마르크스, 프로이트 등의 지적 유산에 터를 잡으면서, 호르크하이머, 아도르노, 마르쿠제, 벤야민 등에 의해 1930년대에 활동을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독일 특유의 지적 전통을 가리킨다. (Horkheimer, 1972; Adorno, 1973; Marcuse, 1964; Habermas, 1971). 일설에 의하면 이 학파는 이미 해체되었거나 유명무실한 존재에 불과하다고 한다 (Therborn, 1977). 이 학파의 주요 멤버들은 이미 他界하였거나 본산지인 프랑크푸르트 대학을 떠났으며 따라서 프랑크푸르트와 연관되는 비판이론의 맥은 이제 학사적인 의미 밖에 지니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학파에 대한 관심은 이것을 잉태시킨 독일에서 보다는 다른 나라들에서 더욱 고조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보면, 이 학파의 연속성을 주장할 만한 근거도 충분하다 (Held, 1980). 한 예로, 이 학파의 두번째 세대를 대변하는 하버마스는 자신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유산을 계승하고 있음을 공언하고 있으며, 세번째 세대에 속할 젊은 사회과학자들이, 비록 지역적으로 분산되고 논의의 초점이 다변화되기

는 하였지만, 나름대로의 연계를 가지고 오늘날 활동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¹⁾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이 학파의 발전과정에 관한 지성사적 혹은 지식 사회학적 접근(Held, 1980; Jay, 1973; Slater, 1977; Tar, 1977)이 아니라, 이 학파가 발전시켜온 일련의 논쟁적 주제들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이 학파가 명시적으로 마르크스주의와의 대결을 통해 발전시킨 논쟁들이 우리의 관심을 끈다.

우리가 이 논쟁들에 주목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들이 마르크스주의의 전통 안에서 마르크스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설득력있는 노력의 하나를 대변한다고 보기 때문이다.⁽²⁾ 물론 이런 노력이 유독 프랑크푸르트 학파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알튀서르(Louis Althusser)의 구조주의적 마르크스주의가 각광을 받으면서 교조적 속류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도처에서 재생되고 있는 듯이 보인다(Althusser, 1969; Althusser & Balibar, 1970, Poulanzas, 1975; Jäggi, 1976; Hindess, 1977; Wright, 1979). 그럼에도 한가지 분명한 점은 이들 구조주의적 비판들은 그 방향이 正統性의 제고에 있다는 것이다. 즉, 마르크스를 극복한다기 보다는 마르크스주의의 전통 안에 깊숙히 들어와 있는 마르크스에 대한 오해들을 불식함으로써—이런 의미에서 교조적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비판이 불가피하다—마르크스가 실제로 구상했던, 그러나 적절히 이론화시키지는 못했던 유물론적 역사과학의 개념을 재구성하기 위해 마르크스 자신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Althusser, 1969; Althusser & Balibar, 1970; Godelier, 1972).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진정한 모미는 고도의 인식론적 세련됨을 수반하면서 구조주의적 마르크스주의에 남아있는 이러한 正統性에의 집념을 깨끗히 버린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 비판의 화살을 마르크스 자신에게로까지 심화시킴으로서 批判理論의 초점과 구조를 현대의 상황에 맞도록 새롭게 재구성하려는 시도를 보

(1) 한 예로, 1981년도 독일 사회학대회에서는 처음으로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대한 분과토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이 학파에 대한 관심의 연속성을 보여준다 하겠다.

(2) 이에 대한 평가는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부터 긍정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분열되어 있는데, 전자의 대표적인 예로는 Anderson(1976), Therborn(1977)을, 후자의 예로는 McCarthy(1978), Schroyer(1973)을 들 수 있다. 한편, 특히 하버마스에 초점을 맞추어 마르크스주의와의 관계를 다각적으로 평가해 보려는 시도로는 Sensat(1979)를 들 수 있다.

인다는 것이다(Habermas, 1971, 1975, 1976; Wellmer, 1971; Negt, 1969; Sensat, 1979; Held, 1980; Thompson & Held, 1982).

이 글은 마르크스와 프랑크푸르트 학파 사이의 관계를 일차적으로 사회과학적인 수준에서 규명해보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이 글에서 다루어질 쟁점들은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비판, 그의 이론에 나타난 자본축적과 국가의 관계, 자본주의 국가의 기본특성, 그리고 국가소멸을 지향하는 해방적 실천의 문제들이다. 또한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관해서도 이 글이 이 학파의 전체를 다룬다기 보다, 이 학파 안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마르크스와 대결했던 하버마스(Jürgen Habermas)를 중심으로 하고 있음을 밝혀둘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논의를 한정시킨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글의 쟁점들이 하버마스 이후의 프랑크푸르트 학파에서 비로소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이다(Habermas, 1970, 1971, 1973b, 1975, 1979a; Offe, 1972, 1973, 1974, 1976; Wellmer, 1971). 또한 하버마스가 이 글의 쟁점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오페(Claus Offe)와 같은 그의 제자들의 견해를 많이 수렴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일이다. 어찌됐건, 마르크스와 하버마스의 관계에는 다면적이면서 심세한 주의를 요하는 까다로운 쟁점들이 있는 관계로, 이 글은 그들의 텍스트를 필요한 곳에 직접 인용하는 방식을 택하고자 한다.

I. 마르크스의 사회이론

(1) 정치경제학 비판

마르크스의 저술들에 전기와 후기를 가로지르는 “인식론적 단절”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아직도 논쟁이 계속중이지만,⁽³⁾ 후기 마르크스의 주요관심이 정치경제학의 비판에 집중되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보다 원숙한 이론적 경지의 마르크스가 구상했던 비판이론의 핵심은 사실 『資本論』이나 *Grundrisse* 등으로 대변되는 그의 정치경제학 비판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우리의 일차적 관심은 정치경제학과 마르크스 이론 사이의 차이들에 쏠린다고 하겠다.

(3) 인식론적 단절을 주장하는 구조주의적 입장은 Althusser(1969)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한 가장 거센 비판은 헤겔과 마르크스의 유사성을 강조하는 독일역사주의 진영으로 부터 나온다(Schmidt, 1972).

마르크스는 우선 헤겔의 지적 유산에 근거하여, 고립된 개인과 그 개인의 욕구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상정하는 일체의 태도들을 “자연주의적 환상”에 불과한 것으로 맹렬히 공격하였다. 이것은 예컨대 『독일이데올로기』에 가장 명백히 나타나지만 또한 마르크스가 1857년에 집필했던 『정치경제학 비판서문』을 보아도 분명하다. 마르크스는 인간의 존재양식과 욕구의 내용이 역사의 밖에서 어떤 자연법칙과 같은 것에 의해 초월적으로 인간성 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의 구체적인 생산관계와 사회관계 안에서 형성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마르크스의 발상은 사실 그 당시의 과학적 인식론을 지배했던 경험주의와 비교할때 대담하게 사회학적인 것이었다. 마르크스는 자명하게 받아들여진 인간의 의식이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없고, “사회적으로 규정된 인간의 생산”이 논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Marx, 1970a:124). 다시 말해, 인간을 사회적 산물로 구성시켜 보는 이론적 지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마르크스는 이러한 지평을 결여하고 있던 정치경제학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그 자신의 표현을 빌린다면, 이들 정치경제학자들은 “인간 개개인들을 역사의 산물로 보지 않고 역사의 출발점으로 보며, 역사과정을 따라 형성된 존재로 보지 않고 자연에 의해 단정된 존재로 보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Marx, 1970a:124).

이러한 인식론적 비판으로 부터 출발하여 마르크스는 정치경제학의 기초 개념들과 이들의 복합으로 드러나는 이론적 전략 그리고 이들의 효과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한 예로, 마르크스는 노동에 근거한 가치이론을 재구성함으로써 정치경제학의 기초개념들이 잉여가치의 존재를 은밀히 은폐하고 이것을 이윤의 개념으로 대체시키는 효과를 갖는다고 지적한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분석의 기초가 되는 기본개념들을 『자본론』 제 1권의 제 1장에서 체계적으로 정돈하고 있다(Marx, 1976). 이러한 시도들은 어느 의미에서 마르크스가 구상했던 이데올로기 비판의 기본전제를 제공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⁴⁾

또한 마르크스는 생산과 분배 및 소비를 별개의 영역들로 분리하여 다루는 당시의 일반화된 전략에 대하여, 생산, 분배 및 소비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틀 안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규정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4) 마르크스 이론안에서의 다양한 이데올로기 개념들을 정리하면서 이들을 『資本論』의 기본논리와 잘 연결시키고 있는 작품으로는 J. Larrain(1979)를 볼 것.

분배에 관해 말하자면, 자본과 노동 사이의 생산관계가 근본적으로 분배 질서의 불평등 안에 투영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마르크스 자신이 『자본론』 제 3권에서 결론적으로 썼듯이 “구체적인 분배관계는 역사적으로 규정된 생산 관계의 단순한 표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Marx, 1967:882). 더 나아가 마르크스는 소비 역시 생산관계에 의해 규정된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생산이 소비의 재료를 제공해주고 소비의 양식을 결정해주며 또한 소비대상에 대한 욕구를 소비자에게 창조해 주기 때문이다(Marx, 1970a:1337). 이러한 논의를 통해 마르크스는 생산과 분배 및 소비 사이의 유기적인 연관성을 강조하면서 본질적으로 생산우위의 관점을 확립하려 한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가장 핵심적인 비판은 정치경제학의 기초개념들과 전락들이 자본주의 사회의 긴장과 모순들을 규명해 주기 보다 오히려 이들을 은폐시키는 효과를 갖는다고 주장한다는 점일 것이다. 정치경제학에 묘사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이것이 “마치 역사와 무관한 영구한 자연법에 의해 규제되는 것처럼 나타나고, 또한 부르조아관계는 극도로 추상화되어 이것이 마치 거부불가능한 사회의 자연법인 양 은밀히 간주되어 버린다”는 것이다(Marx, 1970a: 127). 이 결과는, 단적으로 말하여, 자본과 노동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체계적으로 은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대신 “실제적인 역사과정의 기술에는 거의 아무런 도움도 안되는 추상화된 일반모델들”——에컨대 수요공급 및 균형의 모델——이 채택되어, 시장법칙 자체의 논리에 의해 자본과 노동이 결국 공평한 관계에 서게 된다는 이데올로기적인 관점이 체계화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Marx, 1970a:129).

그러나 이처럼 추상화되고 일반화된 개념구성과 전락들에 마르크스는 부르조아 계급의 이해가 깊숙히 침투해 있다고 본다. 지배계급의 이해가 그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이론의 추상성에 의해 가려져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마르크스가 벌리는 작업은 정치경제학이 회피하거나 간과해 버린 것 다시 말해 자본과 노동의 대립적 관계를 자체의 변증법적 성격에 충실하게 역사적으로 다룸으로써 대안적 이론을 제시하고 기존 이론의 추상성과 일반성을 깨는 데 집중되어 있다.

이 결과는 사뭇 의미심장한 것이다. 부르조아 이론가들에 의해 時空을 초월하여 적용되었던 일반법칙 혹은 일반조건들은 이로써 철저히 거부되는 반면, 자본과 노동 사이의 관계들이 다각적이고 구체적으로 개진되면서 이들이

이론구성상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이러한 전략은 자본주의 경제의 역사적 성격을 분명히 드러나게 해주고, 이 안에 내포된 긴장과 모순 그리고 이것의 전개과정으로서의 사회변동을 보다 사회학적으로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이다. 즉, 자본과 노동의 관계에 입각하여 자본주의 사회의 동태를 이해함으로써, 부르조아지에 의한 지배의 관계가 영구불변의 자연법적인 것이 아니고 모순을 안고 있는, 그리고 실천적으로 극복될 수 있는 역사적 성격의 것임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마르크스는 역사를 자연화시키는 발상, 혹은 자연법에 입각한 역사의 이해로부터 탈피하여, 한편으로는 역사의 법칙성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 법칙의 기반이 다른데 있지 않고 조직화된 인간의 실천에 있다는 점에서 그 특수성을 강조하는 변증법적 관점을 발전시켜 간다.⁽⁵⁾ 그리고 바로 이러한 방법론적 문제의식의 맥락 안에서 마르크스는 그의 이론을 무엇보다도 실천적 지향을 갖는 사회 비판으로 이해하는 것이다.⁽⁶⁾ 한 예로써, 그가 시도했던 정치경제학 비판은 엄밀히 보아 일차적으로 이론적 성격의 것이지만,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대두라는 역사적 배경의 이해가 없이 우리가 정치경제학을 이해하기란 힘들고, 또한 이 이론의 개념구조와 기본전략이 부르조아 계급의 이해에 근거하고 있다고 할 때, 이 이론의 비판은 인식론적으로 사회비판의 성격을 강하게 지닐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Schmidt, 1968:30-42). 마르크스는 이러한 성격의 작업이 이데올로기 비판에 주요하다고 생각했으며, 또한 이러한 비판이 사회변동을 촉매시킬 수 있다고 본 점에서, 그는 이론과 실천을 특유의 변증법적 방식으로 연결했다고 할 수 있다.

(2) 자본주의 경제의 자율성

정치경제학의 비판을 통해 마르크스가 도달한 결론은 결국 “자본과 임금노동의 관계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전반적 특성을 규정해 주는” 관건이 된다는 것이다(Marx, 1967:880). 여기서 자본과 임금노동의 관계는 곧장 자본가와 임금노동자의 관계로 환원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다. 왜냐하면 “자

(5) 그러나 이러한 시각이 오늘날 계승·발전되고 있는 것은 정통 마르크스주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밖에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이 잘 드러나 있는 저술로는 Giddens(1979), Bourdieu(1977), Touraine(1977)을 들 수 있다.

(6) 이러한 해석을 가장 극명하게 발전시킨 이론가가 바로 하버마스라고 할 수 있다.

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주요 행위자들로서 자본가와 임금노동자는 그 자체로서는 단순히 자본과 임금노동이 外化되어 나타난 것, 혹은 인간화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Marx, 1967:880).

자본과 임금노동의 관계는 물론 구조화된 착취와 지배의 관계로 나타나며 비대칭적인 관계로 파악된다. 여기서 비대칭성이라 함은 일차적으로 정치적인 것이 아니고 경제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즉, 임금노동에 대한 자본의 지배는 다른 어떤 경제외적 방법에 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즉 자본가가 노동시장에서 임금계약제도를 통해 임금노동을 상품으로 구입하고 구입된 이 상품을 통제하며 임금노동에 의해 생산된 잉여가치를 사적으로 점유하고 처분하는 합법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 등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잘 알려진 바와 마찬가지로 모든 가치의 원천이 임금노동에 있음을 주장한다. 이에 관한 이론적 분석의 기반은 『資本論』 1권 1장에서 마련되지만, 보다 역사적인 분석은 그뒤에 시도된 원시축적과정에 관한 분석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서 마르크스는 근대적인 자본형성의 전제조건으로서 광범위한 근로무산대중이 정치권력의 비호 아래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이들의 조직화된 착취에 근거하여 자본의 원시적 축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기술하고 있다. 요컨대, 마르크스에 의하면 자본화된 잉여가치의 원천이 임금노동에 있기 때문에 모든 자본의 기원은 결국 노동에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마르크스에 의하면 자본주의의 전개과정 안에서 자본은 갈수록 임금노동과 분리된 자체의 독자적 힘을 발전시킨다. 자본은 단순히 노동과 구별되는 객관성을 얻을 뿐 아니라, 갈수록 노동위에 군림하여 노동을 통제하는 힘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여기에서 인간역사의 진정한 소의를 묵도하고 이데올로기의 심연을 발전한다. 그의 표현대로, 자본축적의 진정한 원인은 사실상 “노동생산력의 구체적인 발전”에 있지만, 그 결과로 나온 잉여가치가 실제로 자본가에 의해 합법적으로 점유되는 이상, “이것은 또한 노동자에게 강요되고 노동자 자신의 발전을 정면에서 가로막는 자본의 자립적 힘에 근거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한다”는 것이다(Marx, 1967:881).

마르크스가 시장운동을 지배하는 것으로 제시했던 가치의 법칙은 결국 마르크스에 의하면 임금노동의 착취에 근거하여 자본의 규모와 권력을 더욱

신장시키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성격의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가치의 법칙이 자본가에 의해 고안된 것이라거나 자본가에 의해 통제되는 것으로 마르크스가 본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가치의 법칙은 자본가 위에 군림하는 법칙이며, 이윤체감의 법칙에서 드러나듯이 궁극적으로 자본주의의 모형을 파는 법칙으로 작용한다.

그렇다면, 가치의 법칙은 일종의 자연법과 같은 것으로서 자본주의 사회로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숙명적인 성격의 것인가? 가치의 법칙이 한편으로는 임금노동의 희생위에 자본을 더욱 부유하게 만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의 모형을 파는 법칙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르크스의 후기저술들을 보면 그가 가치의 법칙을 일종의 자연법과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듯한 구절들이 많다(보기, Marx, 1976:899). 분명히 그는 가치의 법칙에 의해 자본주의사회의 구조화된 불평등과 동태 및 미래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음에 틀림없다. 이러한 마르크스의 인식은 몇 가지의 전제들 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첫째, 가치의 법칙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의 메카니즘을 통해 구현되는데,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경제의 틀안에서 어떤 제도나 조직도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못하다고 전제하였다. 뒤에 보겠지만, 예컨대 국가의 경우, 이것이 가치의 법칙을 초월하여 이것을 통제·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것에 예속되고 이것에 수단적인 성격의 것으로 본 것이다(Marx & Engels, 1970; Engels, 1972; Altvater, 1973). 따라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경제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의 자율성 안에서 유지·발전되리라고 믿었던 것이다.

둘째, 시장경제의 운영원리는 끊임없는 자유경쟁에 있는 바, 마르크스는 사적 이윤을 향한 자본가들의 이러한 “무정부적” 경쟁상태 안에서 가치의 법칙이 개개 자본가들의 의사를 초월하여 그들을 규제하는 객관성을 얻게 된다고 보았다(Marx, 1967:881). 요컨대, 가치의 법칙은 자본가들도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들 사이의 경쟁을 전제하고 그 위에서 실현된다는 것이다.

셋째, 자본가들의 주된 관심은 그 성격에 있어 공적이라기보다는 사적이고 보편적이라기보다는 특수한 성격의 이해를 경쟁적으로 추구해 가는 데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 분파들로 분열되어 있어, 그들 사이에 있어서 조

차도 어떤 공동의 합의와 같은 것을 만들어 내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존재로 인식된다.⁽⁷⁾ 따라서 그들은 그들에게 부과되는 가치의 법칙에 대해 순응할 뿐, 속수무책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들 위에서 마르크스는 가치의 법칙이 자본의 이익에 봉사하면서도 동시에 자본가 위에 군림하는 자연법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시장운동의 내적 법칙은 자본가들 사이의 경쟁을 통해, 그리고 그들이 갖는 서로에 대한 서로의 압박에 의해 실현된다. 아울러 균형상태를 벗어난 다양한 일탈현상들도 그들 사이의 경쟁을 통해 다시 균형상태로 돌아오는 것이다. 가치의 법칙은 오직 이러한 내적 법칙으로만 작용하며, 자본가 개개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성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맹목적인 법칙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리고 우발적인 경기변동의 소용돌이 안에서 생산의 균형을 유지시키는 것이다(Marx, 1967:880).

이러한 가치의 법칙은 마르크스에 의하면, 자본가들 사이의 “무정부적 경쟁”을 통해 실현될 뿐 아니라 “자본가 개개인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압도적인 자연법으로 그들에게 부과되는” 성격의 것이다(Marx, 1967:881).

이렇게 볼 때, 분석대상으로서의 자본주의경제를 바라보는 마르크스의 시각은 그가 비판했던 정치경제학의 관점들과 현저히 다른 것이다. 인식의 대상이 급진적으로 역사화되는가 하면, 이 대상에 접근해 가는 방식은 근본적으로 비판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 이에 따라 이론구성의 전략도 달라지고 개념구조와 이론의 실천적 지향도 달라진다. 말하자면, 마르크스는 당시의 지적인 상황으로 볼 때 중요한 면들에서 매우 혁신적인 하나의 새로운 인식론적 패러다임을 만들어낸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마르크스가 자신이 비판했던 정치경제학의 어떤 가정들은 은밀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가정들 중의 하나가 바로 이하에서 우리가 살펴볼 자본주의 경제의 자율성에 관한 것이다.

자율성이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잉여가치를 창출해내고 이에 입각하여 자본이 자체를 확대시켜 가는 과정이 근본적으로 자본 자체의 자율적 운동에

(7) 바로 이러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하여 엥겔스(1957)는 실제로 존재할 수 없는 전체 자본가 집단의 공동이해를 창출해내는 조직이 국가라는 관점에 도달한다.

의해 실현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과정들이 시장 메카니즘에 의해 조종되고 통제된다는 부르조아 경제학의 기본전제와 크게 다른 것이 아니다. 체제이론적으로 말한다면, 자본주의사회의 특수성은 이것의 한 하위체제인 경제체제가 근본적으로 시장 메카니즘의 자율성에 의해 움직여 가는 데 있다고 마르크스는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근거에서 마르크스는 “자본이 잉여가치를 생산해 내는 만큼 본질적으로 자본이 자본을 생산해낸다”고 여러 곳에서 쓸 수 있었던 것이다(Marx, 1967:880). 또한 이러한 근거에서 그는 자본주의사회의 동태가 “원천적으로 자기확대의 능력을 지닌 자본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강조하지 않았나 생각된다(Marx, 1967:881).

물론 자본주의경제의 자율성을 바라보는 시각과 이것을 구성시켜주는 개념의 틀은 마르크스이론과 정치경제학의 경우 현저히 다르다. 후자에서는 시장법칙이 일종의 자연법칙과 같은 것으로 간주되지만, 전자, 즉 마르크스이론에서는 경제적으로 규정되어진 자본에 의한 노동의 지배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마르크스가 본 자본주의사회의 특성은 계급지배가 그 이전 사회들과는 달리, 직접적으로 정치적인 형태를 띠지 않고 시장법칙이라는 비정치적 메카니즘을 통해 구현되는데 있다. 이러한 차이는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 역시 자본주의 경제가 그 자체의 시장법칙에 의해 규제된다는 관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문도 표시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인다. 오히려 마르크스의 대표작, 『資本論』도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러한 가정 위에 쓰여졌지 않았나 생각된다. 마르크스는 자본에 의한 노동의 지배가 자본주의사회에서 시장 메카니즘이라는 비정치적 형식을 통해 확립되어 있음을 갈파했다는 점에서, 그가 비판했던 정치경제학의 한계를 단언 뛰어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자본주의경제의 자율성까지를 의심했던 것은 아니다. 그가 의심한 것은, 소위 시장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자본가의 이익에 부응하여 자본의 자기확대과정으로 연결되어져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이러한 시장운동이 자기통제적이며 자기조정적이고 또한 어느 의미에서 자기완결적인 자본주의경제의 내적 법칙에 의해 움직여진다고 보았고, 이런 발상에서 가치이론을 설명적 능력을 가진 이론으로 제시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다시 말해, 모든 사회형성의 기반으로 자본주의경제는 가치법칙이라는 그 자체의 법칙에 의해 움직이고 있으며, 그 법칙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마르크스는 본 것이다.

(3) 원시축적과 국가의 역할

그러나 자본축적과정이 가치의 법칙에 의해 이끌려진다는 마르크스의 발상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 저변에는 일정한 정치적인 전제조건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장경제에 법적인 질서를 부여하고 자본의 지배를 정당화시키는 어떤 힘의 기반 위에서 비로소 가치의 법칙이 마르크스가 분석했던 대로 자본축적을 가능케 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화된 힘이 곧 국가권력이다. 자본주의국가에 관한 마르크스의 진술들은 그러나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뿐아니라 극히 단편적이고 초보적인 것들이어서 조심스러운 접근을 필요로 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마르크스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요시했다는 점에서 헤겔의 전통을 따르고 있지만, 내용의 면에서는 헤겔과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국가는 기본적으로 시민사회로부터 도출된 것으로서 그 안에서 형성된 계급관계와 자본축적의 논리에 예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마르크스의 관점이다. 그는 시민사회와 국가의 관계를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일정한 생산력의 발전단계에서 나타나는 개개인들간의 모든 물질적 상호접촉을 포함한다. 시민사회는 일정한 발전단계에서의 모든 상업적, 산업적 생활을 포함하는데, 이것은 한편에서 보면 국가와 민족을 초월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 보면 외국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민족적인 것으로 표현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내부적으로는 자신을 국가로서 조직하지 않을 수 없다(Marx & Engels, 1970:57).

이 인용구의 마지막 부분은 명백히 자본주의경제가 국가로 표현되는 정치적 지배기구를 전제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여기서 논의는 두가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데, 하나는 마르크스의 텍스트 안에 나타난 국가의 역할을 자본주의사회의 구체적인 전개과정에서 역사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이론의 수준에서 마르크스가 제시하는 자본주의국가의 기본성격을 규명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이 두가지의 작업을 이하에서 순서대로 간략히 살펴보겠다

첫번째 방향의 논의는 성격상 경험적 논증이 가능한 것으로서, 이에 관해 좋은 길잡이가 되는 것이 『資本論』 제 1권에서 시도된 원시축적과정에 관한 분석이다. 이것을 보면 마르크스가 가치의 법칙이라고 부른 것이 결코 권력의 진공상태에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로 정치적 체계 모니를 전제한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다시 말해, 마르크스가 자본 자체의 자율적인 법칙에 의해 이끌려지는 것처럼 묘사했던 자본축적과정도 사실은 이미 확고하게 정립된 국가권력의 자본주의적 성격을 전제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이것이 특히 “자본주의적 생산의 역사적 탄생기”에 더욱 그러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부상중인 부르조아지는 봉건적 생산양식을 자본주의적인 것으로 변환시키고, 이 전환을 단속시키기 위해 국가권력이라고 하는, 집중되고 조직된 사회의 힘을 필요하기” 때문이다(Marx, 1976:899-900). 마르크스는 “이 힘의 사용이야말로 원시축적과정의 본질적인 측면이다”라고 쓰고 있다(Marx, 1976:900).

마르크스가 도달한 결론은 결국 노동에 대한 자본의 지배가 시장 메카니즘을 통해 확립되기 위해서는, 가치의 법칙이 충실히 기능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조건들을 제공해 주는 국가의 역할이 전제된다는 것이다.

자본의 원시적 축적에 국가권력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마르크스는 특히 노동대중의 역사적 형성에 주목하여 보여준다. 촛점의 한 사례가 바로 영국에서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진행된 「인클로저」운동이다. 이로 인해 토지로부터 쫓겨난 농민대중은 “구걸하거나 부랑아가 되고 강도가 되기도 했지만…… 교수형이나 차꼬 및 채찍질 등에 의해 이러한 길로부터 벗어나 노동시장이라는 좁은 길에로 몰려들게 되었다”고 마르크스는 쓰고 있다(Marx, 1973:507). 말하자면, 국가가 무제한의 노동인력을 제공해 줌으로서 이들의 착취에 근거하여 자본축적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노동대중은 노동생산성의 증가를 겨냥한 갖가지의 노동훈련을 통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한 요소로서 변모되어 간다. 획일적이고 과학적인 시간관리의 기법들이 한 예이다. 마르크스는 『자본론』 제 1권, 15장에서 근대적인 공장제도의 출현과 더불어 나타난 「공장법」을 포함한 입법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다루고 있고, 또한 10장에서는 근로일수의 제한을 둘러싼 투쟁과 1833~1864까지의 공장법에 관한 연구를 수록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28장에서는 임금노동의 훈련에 주효했던 법적 수단들을 기술하고

있다. “근대적인 획일성과 노동시간, 한계 및 휴식의 정확성으로 노동을 규제하려는 고도로 상세한 이 규정들”은, 마르크스에 의하면, 결코 ‘입법가들의 상상력의 산물이 아니고, “근대적 생산양식의 자연법으로서 상황에 따라 점차로 발전되어 나온 것이다”(Marx, 1976:394-395). 이처럼 국가권력의 지원아래 수행된 교육과 훈련, 전통 및 습관 등으로 인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필요조건들을 자명한 자연법인 양 간주하는 노동계급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4) 자본주의국가의 기본성격

그러면 이러한 마르크스의 분석에는 어떤 국가개념이 전제되어 있는 것일까? 이제 논의를 보다 일반이론적인 수준으로 옮겨 자본주의국가의 기본성격을 규명해 볼 차례가 되었다.

이에 관해 우리는 마르크스와 엥겔스로부터 유의미하게 구별해 볼 수 있는 두가지의 접근 방향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하나는 편의상 국가에 관한 수단이론적 접근이라 칭할 수 있는 것으로서 여기서는 주요관심이 권력집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있다. 이 접근을 취할 때 국가는 본질적으로 경제적 지배계급의 이익에 봉사하는 국가로 나타난다. 이에 반해, 다른 하나의 접근은 편의상 구조론적 접근이라 칭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본주의경제 전체의 관리와 운영에 국가가 어떤 특수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쏟는다. 이 두가지 접근은 결코 서로 모순적인 것은 아니지만 의미와 초점은 명백히 다르다. 전자, 즉 수단이론적 발상에 의하면, 국가란 이미 시민사회에서 형성된 지배관계의 외연에 불과한 것으로서 국가활동이 자체의 어떤 법칙에 의해 이루어지는가에 보다, 권력집단이 누구인가에 더욱 초점을 맞춘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자체의 자율성을 지녔다기보다는 자본주의경제라는 외부구조에 의해 규정되어지고 예측된 것으로 나타난다(Offe, 1972:66-74). 이에 반해, 후자의 관점은 국가를 특수 자본가 집단의 이해를 넘어선 자본주의경제 전체의 관리에 연결시킨다는 점에서 구조주의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면들을 지니고 있다. 즉, 자본주의국가의 상대적 자율성과 국가와 경제의 포괄적인 관계를 탐색하는데 이 관점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Offe, 1972; Poulanzas, 1975).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의 역사에서 주종을 이루어왔던 국가에 대한 발상은

엄밀한 의미의 구조론적 성격의 것이 아니라 수단이론적 관점이었다고 할수 있다. 이러한 관점이 가장 분명히 피력되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독일 이데올로기』에서가 아닐까 생각된다. 여기서 마르크스는 “모든 지배적 관념은 지배계급의 관념이다” 라는 논리의 연속선상에서 모든 국가는 지배계급의 국가라는 관점을 제시한다. “국가란 지배계급의 개인들이 그들의 공공이해를 표현하는 형식이며, 전체시민사회가 요약되는 형식인 한, 모든 일상제도들의 형성에 국가가 개입하고 이 제도들에 정치적 형태를 부여한다”(Marx & Engels, 1970:80).

국가=지배계급의 국가라는 공식은 그뒤 마르크스주의의 기본정석과 같은 것으로 발전되어 왔다. 뒤에 보겠지만, 구조론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관점을 피력했던 엥겔스 역시 수단이론적 발상을 버린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국가란 소유계급이 비소유계급에 대항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라고 씀으로써 이 관점을 옹호하고 있다(Engels, 1972:231).

국가는 계급대립을 통제해야 할 필요성에서 나왔고, 또 계급간의 분쟁으로 부터 나온 것인 만큼, 이것은 대체로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하고 지배적인 계급의 국가이다. 이 계급은 자체의 [경제적] 수단에 의해 정치적으로도 지배적인 계급이 되며, 피지배 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새로운 수단들을 얻게되는 것이다(Engels, 1972:231).

한편, 국가의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쏟았던 레닌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그는 국가의 문제를 “우리 시대의 모든 정치적 문제들과 논쟁의 초점이 되고 있는 문제”로 부각시킴으로써, 이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지만(Lenin, 1951:12), 국가를 보는 눈은 “한 계급이 다른 계급들을 억압하는 기제, 종속계급들을 어느 한 계급에 복종시키는 기제”로 못박고 있어 지배계급의 모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Lenin, 1951:8).

물론 이 관점이 전적으로 틀렸거나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관점만을 독단적으로 따를 때, 국가 그 자체를 그 자체의 작용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밖으로 부터 규정되어진 것으로 전제하고 접근하기 때문에, 레닌이 표현한대로 “자본이 지배하는 곳의 국가는 어느 것이나 자본주의국가다”라는 관점이 나오는 것이다(Lenin, 1951:13). 레닌에 의하면 “국가는 노동자계급과 빈곤한 농민을 복종시키는

자본가 수증의 한 도구"에 불과하게 된다. 따라서 그는 "권력은 본질적으로 자본의 수중에 있다"고 역설하는 것이다(Lenin, 1951:13).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이러한 시각을 따를 때, 의회와 같은 국가기구를 통한 개혁은 피상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기 쉽다. 레닌의 논쟁이 한 예이다. 그는 한편으로는 "민주공화정과 보편선거는 농노가 존재했던 시대의 사회질서와 비교해 볼 때 놀라운 진보를 뜻한다"고 쓰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보편선거, 입헌의회 혹은 국회는 현재 통용되고 있는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며 실제에 있어서는 하등의 실질적인 변동도 가져오지 않는다"고 쓰고 있다(Lenin, 1951:13). 왜냐하면 이 국가는 "비록 외부적으로는 자유롭지만, 그 전과 마찬가지로, 빈곤한 농민과 노동자 계급을 복종시키고 자본가들에 봉사하는 기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Lenin, 1951:11). 레닌의 관점에서 본다면, 자본의 영향력이 의회에서처럼 막강하게 행사되는 곳도 없기" 때문에 "의회와 선거는 그저 꼭두각시나 인형과 같은 것들"로 파악될 수 있을 뿐이다(Lenin, 1951:14).

사유재산, 즉 자본의 힘에 근거하고 있는 자본주의사회는...정치적 지배가 자유에 근거하고 있다고 선언한다. 농노제에 대항하면서 이 사회는 재산의 자유를 선언하고 국가는 이제 계급국가가 아니라고 자랑스럽게 절제한다. 그러나 이 국가는—비록 외부적으로는 자유롭지만—그 전과 마찬가지로, 빈곤한 농민과 노동자계급을 복종의 상태로 유지시키고 자본가들에게 봉사하는 기제로 남아 있다(Lenin, 1951:11).

결국, 마르크스로부터 레닌에 이르기까지 국가를 보는 하나의 지배적인 시각은 국가를 자체활동의 법칙성과 자율성에 의해 보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 밖에 존재하는 자본주의경제에 의해 성격이 결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국가는 따라서 기본적으로 자본가계급의 지배를 위한 국가로 파악된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점은 마르크스주의의 수단이론적 국가개념과 정치경제학의 자유방임주의적 국가개념 사이에는 기묘하게도 공통되는점이 많다는 것이다. 물론 전자의 실제내용은 매우 과격한 것이어서 마르크스가 비판했던 정치경제학과 크게 구별되는 면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이론에서 국가에 부여된 이론적 위치는 비슷하다. 어느

경우에든, 국가는 이미 자본주의경제에 예측된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기껏해야 경제체계의 필요조건들을 제공해주는 정도에서 이해될 뿐, 자본축적의 기본논리를 설명하는 데는 별 중요성을 지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관심은 압도적으로 자본주의경제와 그 안에서의 계급관계에 쏠리지 않을 수 없게 되며, 국가활동은 이에 보조적이거나 지엽적인 것, 그리고 지배계급에 수단적인 것 정도로 나타나게 된다. 마르크스의 국가개념은 특히 계급관계를 강조하기 때문에 국가의 성격규정에 있어서 독특한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가 비판했던 정치경제학과 더불어 국가에 대한 수단이론적 접근을 공유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한편, 수단이론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마르크스주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앞서 언급했던 구조론적 접근이다. 이 접근의 필요성은 바로 수단이론의 한계들로부터 나온다고 할 수 있다. 국가를 경제적 지배계급의 국가라고 보는 관점은 이 지배계급이 왜 애당초 국가라고 하는 공공권력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 의문조차 제기하지 않는다. 왜 부르조아 계급이 자본주의경제라는 사적 메카니즘을 통해 시민사회를 충분히 지배하지 못하고 공적인 국가기구를 통해 지배를 행사해야만 되는 것일까? 일찌기 파쉬카니(Pashukanis)가 지적하였듯이 :

[시민사회안에서의] 한 계급의 지배가 왜 그 자체로서 계속되지 않는 것일까? 다시 말해, 인구의 어떤 부분이 다른 부분에 종속된 채로 계속 남아있지 않는 것일까? 이 지배가 공적인 국가지배의 형태를 취해야만 하는 것일까? 같은 이야기로서 국가권력의 메카니즘이 단순한 지배계급의 사적인 메카니즘으로서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이것이 지배계급으로부터 분리되어 시민사회와 구별되는 비인격적이고 공적인 권력메카니즘의 형식을 취하는 것일까? (Pashukanis, 1978:139).

이 질문은 자본주의국가의 기본성격을 해명하는 데 매우 핵심적인 것으로서, 국가문제에 관한 많은 논쟁들을 마르크스주의 안에서 촉발시킨 배경이 되고 있다.⁽⁸⁾ 이 경우, 국가를 단순히 지배계급의 국가로만 제시하는 것은

(8) 소비에트 정통 마르크스주의 안에서의 논의들을 이해하는 데는 Lenin *et al.* (1951)이 참고가 된다. 한편, Miliband(1969)와 Poulanzas(1969, 1976)의 논쟁, 그리고 Offe(1972), Habermas(1975)와 Altvater(1973), Müller & Neusüß(1971)의 논쟁 역시 이러한 배경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피상적인것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라는 공공권력 기구가 왜 부르조아 계급의 지배를 위해 필요해지는가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이유는 국가를 단순히 지배계급의 도구로 보기에, 그렇게 단순화 시킬 수 없고 또 때로는 이와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질적인 요소들이 국가 안에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다. 오페의 주장처럼, 국가는 “자본축적과정을 보호하고 조정하는 객관적 의미를 지닌 적응전략의 결과”로 설명될 수도 있지만, 또한 “사적인 자본실현의 논리와 기능적으로 모순되는 구조적 요인들”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Offe, 1972: 27). 따라서 자본주의경제와 국가의 관계는 보다 엄밀한 분석을 요하는 쟁점으로 부상되는 것이다.

위의 질문에 대해 최초의 그럴듯한——그러나 결코 만족스럽지 못한——해답을 제시한 사람은 엥겔스이다. 그는 『가족과 사유재산과 국가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자본주의국가의 기본성격을 시민사회의 모순과 연관시킨다. 시민사회의 모순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노동과 자본의 대립이고 다른 하나는 자본 내부에서의 대립이다. 후자는 생산단위로서의 각 기업들이 사적인 특수이해를 경쟁적으로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의 공동이익을 위해 어떤 합의를 만들어낼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채 적대적으로 대립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엥겔스는 이러한 맥락에서 자본주의국가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국가는 결코 시민사회 밖으로 부터 그 위에 부과된 권력이 아니다. 헤겔이 주장했듯이, 국가가 ‘도덕적 관념의 실재’인 것도 아니고 ‘이성의 실재’인 것도 아니다. 이것은 오히려 특수한 발전단계의 사회적 산물이다. 국가란 사회가 해결불가능한 자기모순에 빠져있으며, 도저히 추방할 수 없는 화해불가능의 대립으로 균열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처럼 대립 속에서 갈등적인 경제적 이해를 추구하는 계급들이 자체를 삼켜버려 사회를 쓸모없는 투쟁속에 방치시켜 버리지 않으려면, 명백히 어떤 권력이 사회 위에서 있으면서 갈등을 중재하고, 이것을 일정한 질서의 틀 안에 유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 권력, 다시 말해, 사회로부터 유래했지만 그 위에 위치하고 갈수록 더욱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존재하는 권력이 바로 국가인 것이다(Engels, 1972:229).

엥겔스는 *Anti-Dühring*에서 자본주의국가의 성격을 보다 정확히 규명하려

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근대국가는 노동자들로부터 오는 침입과 개개 자본가들로부터 오는 침입에 대항하여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일반적 조건들을 지키기 위하여 시민사회로부터 나온 조직이다. 근대국가는 그 형식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자본주의적 기제이며 자본가의 국가, 상상적 의미의 전체자본가의 국가이다(Engels, 1957:26, 제인용, Altvater, 1973:193).

여기서 특기할 만한 점은 자본주의경제에 대한 위협이 비단 노동자들로부터만 오는 것이 아니라 개개 자본가들로부터도 온다고 엥겔스가 본 점이다. 그 이유는 생산단위로서의 자본이 목전의 개별적이고 특수한 이해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전체자본주의경제에 유해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데 있다. 그럼에도,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자본가들은 근본적으로 서로 경쟁적이고 적대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합의를 창출시킬 수 있는 능력도, 기제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다시 말해, “전체자본가”의 합의된 의사와 같은 것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오직 논리적으로만 가능할 뿐 실제로는 공상적이라는 것이다. 엥겔스에 의하면, 국가는 바로 이 가공적인 혹은 허구적인 “전체자본가”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이다. 즉, 근대국가는 기본적으로 자본가의 국가이지만, 특수자본가들의 이해를 보호해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가공적인 전체자본가의 입장에 서서 자본주의경제 전체를 보호하고 이끌어가는 일종의 “관리위원회”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확실히 국가를 단순히 하부구조의 반영으로 보거나 지배계급의 도구로 보는 이론들에 비해 국가활동의 적극적인 측면들을 부각시키고 상대적 자율성을 포착하는 데 유용한 것처럼 보인다. 특수한 자본분파들의 이해를 초월하여 국가가 경제전체를 이끌어 가고 관리해 가는 면을 포착하는 데 이 개념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1960년대 이후에 마르크스주의 안에서 일어난 국가논쟁들은 다같이 국가에 관한 수단이론적이고 환원론적인 접근의 문제점들을 극복하려는 의도 하에 일어난 것으로서, 엥겔스의 구조론적 관점이 이러한 논쟁에 하나의 돌파구를 제공해 준 셈이 되었다(Poulanzas, 1969, 1975, 1976; Offe, 1972; Altvater, 1973; Müller & Neusüß, 1971; Habermas, 1975). 그러나 그의 관점은 극히 초보적이고 애매한 것에 불과하다. 자본주의적 국가라고 할 때

“자본주의적”의 분명한 의미를 탐색하는 작업이라든지, 국가로 대변되는 정치적인 것의 특수성을 규명하려는 작업들은 대부분 근래에 일어난 것들이며, 이 작업들은 마르크스-엔겔스 관점에 대한 실질적인 수정을 수반하는 것들이다.

(5) 국가소멸과 해방적 실천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역사관이 가장 체계적으로 정돈되어 있는 『정치경제학 비판공헌』의 서문을 보면, 사회변동의 추진력은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변증법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국가는 여기서 의식, 도덕, 법, 예술 등과 같이 상부구조에 포함되어 있으며, 상부구조 일체는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갈등으로 야기되는 토대의 변동을 따라 불가피하게 변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사회의 물질적 생산력은 어떤 단계의 발전에 도달하면 기존의 생산관계와 갈등하게 된다. 같은 것을 법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지금까지 생산관계의 틀이 되어온 재산관계와 갈등하게 된다. 이것은 기존의 생산관계가 생산력의 발전을 가로막는 족쇄로 변모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회혁명의 시기가 도래한다. 경제적 토대의 변동은 조만간 거대한 상부구조 전체의 이행을 불러온다(Marx, 1970b:21).

국가소멸론의 이론적 근거도 여기에 있다. 국가를 계급갈등의 산물로 보는 입장에서, 엔겔스는 생산관계가 계급차별의 철폐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진전함에 따라 국가도 사라질 것이라고 쓰고 있다.

국가가 항상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국가와 국가권력에 대한 하등의 개념이 없이도 자체를 유지시켰던 사회들도 있었다. 그러나 경제발전의 일정한 단계에서 사회가 불가피하게 계급들로 갈라지게 되면, 바로 이 균열로 인해 국가가 필수적이 된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급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미래의] 생산발전 단계에서는 이러한 계급들이 이 이상 필연적인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생산에 명백히 장애가 되는 그런 단계이다. 이들 계급들은 불가피하게 대두했던 것처럼 또한 불가피하게 사라질 것이다. 이들이 사라짐에 따라 국가 역시 불가피하게 사라질 것이다. 생산자들이 자유롭게 평등한 결합의 터전 위에서 생산을 자유롭게 조직하는 사회가 도래한다면, 국가기구는 이제 이것이 마땅히 속해야 될 곳, 즉 고대박물관에

서 철기로 된 도끼나 회전마차 옆에 있게 될 것이다(Engels, 1972:232).

물론 이때 국가소멸이 의미하는 것은 국가의 행정기능 그 자체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정치적 성격”의 소멸을 의미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일이다.

사회이행에 관한 이와 같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견해는 그 뒤 다양한 해석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상부구조와 하부구조의 일반적 관계는, 머튼이 주장하였듯이 충분히 기능론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Merton, 1968:93-95), 사회이행에서 후자가 전자를 결정해 준다는 관점은 기계적으로 이해되기도 하고 구조론적으로 해석되기도 하였다. 구조론자들은 대체로 상부구조의 “상대적 자율성”과 함께 “구조적 결정론”을 주장한다(Althusser, 1969; Poulanzas, 1975). 그들은 기계론적 해석을 가능케 해 주는 인식론적 기초로서 “표출적 전체성”(expressive totality)을 비판하고, 대안으로서 “구조화된 전체성”(structured totality)을 제시한다(Althusser, 1969:198-204; Althusser & Balibar, 1970: Chap. 9). 요컨대, 상부구조를 이루는 사회형성의 각 단위 혹은 수준들은 자체의 자율성 안에서 독자적인 법칙들을 따라 이루어지지만, 동시에 하부구조에 의한 규정성이 이들 안에 구조적으로 스며 있다는 것이다(Althusser, 1969:206). 이 구조적 결정론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관해 마르크스주의 진영 안에서 카우츠키 이래 많은 논쟁들이 있어 왔다.⁽⁹⁾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점은 사회이행이 실천이 없는 어떤 추상적인 법칙에 의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마르크스가 본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마르크스가 본 사회이행의 추진력은 오히려 혁명적 실천에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가 계급투쟁의 역사임”을 갈파한 『공산당선언』에서 극명하게 나타나지만, 『독일 이데올로기』와 같은 저술에서도 나타난다.

“모든 의식형태와 산물들은 정신비판이나 자의식 안의서의 해결을 통해 해체될 수는 없고, 오직 이러한 관념적인 속임수를 등장시킨 실제적인 사

(9) Kautsky의 관점은 상부구조와 토대의 관계가 마르크스에 의해 어떤 존재론적 가정 위에서 구성된 것이 아니고, 사회가 한 발전단계에서 다른 발전단계에 이행해가는 결정적인 측면에서 전자가 후자에 예측된다는 것이다. (Habermas, 1979:143-144). 이에 비해 Althusser 중심의 구조주의자들은 이보다 더 강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회관계들을 실천적으로 무너뜨림으로서만 비로소 해체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역사의 추진력은 비판이 아니라 혁명이며, 이것은 종교, 철학, 그리고 모든 형태의 이론에서도 마찬가지이다”(Marx & Engels, 1970:58-59).

그러나 마르크스의 저술 안에 혁명이론과 같은 것의 틀이 있지 않나 기대하며 이것의 윤곽을 찾아 보려 한다면 이러한 시도는 곧 큰 좌절을 경험하기 쉽다. 왜냐하면 그는 비록 1848-1851의 프랑스혁명과정을 분석한 저술(Marx, 1972)을 집필했고 동시에 그의 생애에서 직접 노동운동에 깊이 관여한 실천가였지만, 혁명에 관해 이론적 성찰을 할만큼 한가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크리스테바(Kristeva, 1975)가 말했듯이, 마르크스에게는 혁명의 개념은 살아 있지만 혁명의 이론은 거의 미개발의 상태에 있다고 말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입장을 조심스럽게 재구성해 보는 것은 가능한 일처럼 보인다. 특히 혁명의 기본성격과 당위성에 관한 마르크스의 관점과 혁명의 조건들에 대한 마르크스 이론의 암시는 꽤 분명하지 않나 싶다.

혁명의 성격과 당위성에 관해 가장 명시적으로 쓰여진 텍스트는 아마도 『독일 이데올로기』 제 1편의 끝부분이 아닌가 생각된다(Marx & Engels, 1970:94-95). 여기서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혁명의 개념을 발전시킨다.

① 한 사회의 생산력과 생산관계가 불일치될 때, 그 사회는 모순에 빠지게 되는데, 이 때 이러한 모순과 부담을 짊어진 채, 계급간의 대립 속에 뛰어들어 “근본적인 혁명의 필연성에 관한 의식”을 창출해내는 계급이 나타나게 된다.

② 사회의 지배계급은 사유재산에 근거하여 사회권력을 얻게되고 또 자신을 실제적이고 이념적인 국가의 형태로 표현하기 때문에 혁명은 권력의 위치에 있는 계급에 대항해서 일어난다.

③ 진정한 의미의 혁명은 한 계급에 의한 다른 계급의 정복으로 나타나지 않고 계급 자체의 철폐를 지향한다. 지배를 한 형태로부터 다른 형태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배 자체를 철폐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혁명이 “이 이상 사회에서 계급으로 인정될 수 없는 계급, 즉 그 자체가 모든 계급의 해체를 표현하는 계급에 의해 수행되기 때문에 가능해진다”(Marx &

Engels, 1970:94).

그리고 나서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혁명의 당위성을 변론한다.

④ 혁명적 의식의 대량생산과 이러한 운동의 성공을 위해서는 인간을 대규모로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 변화는 오직 실천적 운동, 즉 혁명 안에서 일어날 수 있을 뿐이다. 혁명이 필요한 이유는 단순히 다른 방식으로는 지배계급을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만이 아니라, 또한 이들을 무너뜨리는 계급이 오직 혁명 안에서만 오래된 낡은 오물들을 깨끗히 청산하고 사회를 새롭게 창설하는데 적합해지기 때문이다(Marx & Engels, 1970:94-95).

그러면 혁명적 실천이 과연 어떤 조건들 위에서 가능해지는 것일까? 이에 관한 마르크스의 대답은 대충 두 가지로 요약되지 않을까 생각된다(Habermas, 1973b:70-72). 하나는 자본주의체제의 전개과정에 있어서 해결하기 힘든 체제문제들이 축적되어 결국 체제가 다른 체제로 바뀌어지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을 정도로까지 모순이 심화되는 것이다. 일반적인 수준에서 마르크스가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갈등이라는 표현했던 것도 여기에 속하고, 『資本論』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그가 분석했던 “이윤율 체감의 법칙”과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 요인은 매우 구조적이고 객관적인 성격의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른 요인은 임금노동자들이 단순히 객관적으로 자본가와 대립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대립적 관계를 주관적으로 인지하게 됨으로써 이들이 정치적으로 조직될 수 있게 되는 조건이다. 첫번째 조건이 체제이론적인 것이라면, 두번째 조건은 보다 행동이론에 밀착된 것으로서 即自的 계급이 계급의식을 통해 對自的 계급으로 발전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마르크스의 저술들은 그가 명백히 자본주의 경제의 붕괴를 믿어 의심치 않았음을 보여준다. 즉, 장기적으로 볼 때 자본주의경제가 해결할 수 없는 자체의 모순에 빠져 자본축적이 갈수록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확신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 체제위기의 근원과 동태를 보여주기 위해 이론적 심혈을 기울였다.

계급투쟁에 관해서도 마르크스의 확신은 마찬가지였다고 할 수 있다. 부르조아 이데올로기의 사회통합력에 큰 균열이 야기된 이상, 마르크스는 노동대중이 정치적으로 조직될 수 있다는 데 추호의 의문도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계급의식을 전제하는 계급투쟁의 문제까지를 그가 동일한 수

준의 이론적 엄밀성을 가지고 접근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실천적 문제에 관한 마르크스의 접근에는 이론적인 것에 못지 않게, 전략적인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론적이라 함은 해방적 실천의 의미와 목표를 우선 분명히 밝히고 이것의 가치와 정당성을 논쟁적으로 변호하면서 또한 검토중인 전략과 수단들의 예견가능한 결과들을 엄밀히 점검함으로써, 이들이 과연 목표의 실현에 부합될 것인지를 검증해보는 태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계급사회의 극복과 정치적 지배기구의 철폐라는 목표에 비추어 볼 때, 채택된 전략과 수단들이 과연 어느 정도 적합할지를 열려진 비판정신으로 검토해보는 태도를 의미한다. 이에 반해, 전략적인 태도는 권력의 쟁취라는 주어진 목적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위한 최적의 수단들을 효과적으로 동원해 가는 특성을 갖는다.

해방적 실천의 관점에서 마르크스가 구사한 이론적 성찰의 핵심은 이데올로기 비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마르크스에서 발견되는 이데올로기의 개념들에는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다소의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¹⁰⁾ 여기서 은폐와 대체의 기능을 통해 특정계급의 이익을 대변하고 이것에 봉사하는 지식체계를 가리킨다. 마르크스 자신의 표현을 빌린다면, 이데올로기는 “계급사이의 진정한 관계를 감춤으로써 지배계급의 이익을 사회구성원의 공동이익으로 표상시키고,” 또한 “그 계급의 이념에 보편성을 부여하는” 특성을 갖는다는 것이다(Marx & Engels, 1970:65-66). 다시 말해, 모순적인 현실을 “합리적이고 보편적으로 타당한 유일한 것”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 이데올로기라는 것이다(Marx & Engels, 1970:66). 마르크스는 분명히 이런 의미에서 이데올로기를 허위의식으로 보았고 이것의 극복을 지향하는 비판적 활동에 혁명적 성격을 부여했던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이데올로기 비판을 실행하면서도 이것의 철학적 기반과 이 안에 내포된 정치적 지향을 체계적으로 정돈할 겨를이 없이 곧장 계급투쟁에 관련된 전략적인 문제들에 집착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대중

(10)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이데올로기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이데올로기 비판의 프로그램을 구조주의적 언어이론으로 연결시키려는 시도로는 拙稿, Han (1979)을 참조할 것.

제몽을 조직하고 이들의 정치활동을 이끌어 갈 주체로서 공산당을 상정한다든지, 권력의 쟁취를 통해 계급없는 사회를 건설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대변하는 공산당 독재의 필요성을 인정한 점들이 이것을 보여준다.

해방적 실천이 이러한 전략 하에서 유물론적 이론의 틀과 결부되어 이루어질 때, 그 결과는 비교적 분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유물론적 이론의 시각에서 볼 때, 타파되어야 할 바로 그 계급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속성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것의 불가피한 결과로서 해방적 실천은 무엇보다도 자본주의경제의 해체와 사회주의 경제의 건설에 역점을 두게 되는 반면, 이 과정을 따라오는 권위주의적이고 독재적인 기술관료체제의 문제점은 관심으로 부터 제외되어 버리기 쉬운 것이다. 이것은 곧 해방적 실천이 기술관료적 통제에 쉽게 예속되어, 막스 베버가 일찌기 정확히 갈파한 것처럼, 혁명이란 이름 하에 국가의 소멸이 아니라 보다 권위주의화되고 비민주화된 권력체계의 등장을 불러올 공산이 큼을 의미한다.⁽¹¹⁾

II. 하버마스의 마르크스 비판

이상에서 우리는 자본주의경제와 국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마르크스 이론의 몇가지 측면들을 검토해 보았다. 우리는 우선 마르크스의 접근이 그가 비판했던 정치경제학과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고, 그럼에도 그가 자본주의 경제의 자율성과 국가에 관한 수단이론을 택했다는 점에서 정치경제학의 기본가정들을 공유했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이어 우리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저술에서 자본주의 국가의 기본성격을 규명하려는 노력들을 살펴보고, 초보적이거나 국가소멸을 향한 실천론의 특성을 규명해 보려고 하였다.

이하에서 우리는 마르크스 이론의 문제점들을 프랑크푸르트 학파안에서 가장 진지하게 마르크스와 대결했던 하버마스의 시각에 입각하여 조명해보려고 한다. 하버마스에 관한 논의 역시 여러 방향에서 다양하게 개진될 수 있겠지만, 지면제약상 앞의 논의를 전제하고 세가지 쟁점들에 관한 그의 논

(11)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하버마스는 마르크스 이론의 인식론적 구조를 비판적으로 해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의만을 순서대로 다루고자 한다. 이 쟁점들은 자본주의경제와 국가의 관계, 자본주의국가의 기본성격, 그리고 해방적 실천론의 인식론적 기반이다.

(1) 자본주의 경제와 국가

첫번째 쟁점에 관한 마르크스의 기본입장은, 앞서 논한 것과 같이, 자본 축적 과정은 본질적으로 시장경제의 자율성에 의해 이끌리며, 국가란 이 과정에 수단적인 것 이상이 아니라는 가정들로 특징된다. 마르크스의 이론은 내용에 있어서 정치경제학과 결정적으로 구별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앞에서 논한 바와 같다.

이 가정들의 타당성에 대해 하버마스가 갖는 의문은 원리적인 차원의 것이라기 보다 역사적 경험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의문을 단도직입적으로 적자면, 오늘날의 소위 후기 자본주의체제의 운영방식은 마르크스가 분석했던 초기 자본주의의 실상과 크게 달라진 관계로, 그가 그의 역사적 상황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위의 가정들이 이 이상 통용될 수 없게 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문을 가능케 해 주는 핵심적인 요인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국가개입주의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입장에 의하면, 자본주의가 오늘날 그 동안 비약적으로 증가되어 온 국가개입의 조건 위에서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전제한 분석은 더 이상 타당치 못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마르크스가 수단적이고 지엽적인 것으로 간주했던 국가의 기능이 비단 경제적 측면에서 뿐 아니라, 위기관리의 기능, 교육기능, 이데올로기적 재생산의 기능 등에 걸쳐 급속히 확대된 결과, 이에 대한 적절한 분석이 없이는 자본주의 경제 자체에 대한 이해도 어려워지는 단계에 우리가 도달해 있다는 것이다(Habermas, 1975; Offe, 1972, 1975). 이것은 곧 마르크스가 19세기의 자본주의를 염두에 두고 구상했던 국가와 경제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해야 할 필요성을 암시한다 하겠다.

물론 마르크스가 국가개입의 문제를 전적으로 배제한 것은 아니었다. 앞서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마르크스는 자본의 원시축적과정을 다루면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실제적 바탕이 어떻게 국가 권력에 의해 형성되었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마르크스가 국가로 표현되는 정치적 지배의 특수성을 규명하기보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시민사회안에서

확립된 부르조아 지배의 연속이라고 보았으며, 또한 국가의 실제적 역할도 자본축적과정 그 자체에 개입한다기 보다는 이에 필요한 법적, 정치적, 하부구조적 조건들을 제공해주는 정도에 국한된다고 전제했다는 점이다. 더우기 국가가 시장경제에 적극 개입하여 가치의 법칙을 따라 심화되어 갈 것으로 예상되었던 자본축적상의 위기들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유도·대체·약화시킬 수 있으리라고 마르크스가 생각할 수 없었으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마르크스가 가치의 법칙을 논할 때 권력의 진공상태에서 이것을 일종의 자연법인 것처럼 주장한 것은 결코 아니었지만, 그가 상정한 국가기능은 자본축적의 자율성에 수단적인 것을 결코 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그가 집필했던 19세기의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기본 특성들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오늘날의 후기 자본주의에서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고 논의할 만한 근거가 확실하다. 이에 관한 하버마스의 논의는 그의 제자인 오페의 연구업적들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Offe, 1972, 1973, 1976), 오페의 저술들에서 발견되는 후기 자본주의의 두가지 특성들은 우리의 논의에 특히 중요한 것처럼 보인다.

하나는 자본주의경제와의 관계에서 국가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관한 것이다. 즉, 국가가 단순히 시장경제 밖에서 이에 필요한 일반 조건들을 제공하는 단계는 이미 지나갔고, 오늘날의 국가는 자본축적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이것을 계획하고 관리해야 할 위치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20세기에 들어선 자본주의체제가 그 존립을 위협하는 위기경향들에 직면하여, 생존을 확보하는 하나의 적응방식으로서 국가의 경제적 개입이 크게 강화되었는데, 이 결과로 지금까지 자본축적과정에 대해 대체로 수단적이었던 국가기능이 이에 대해 보완적인 것으로 변모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가활동이 자본주의 경제의 유기적인 요소이며 조건으로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국가활동은 따라서 본질적으로 위기회피 혹은 위기관리의 성격을 강하게 지닌다고 오페는 주장한다(Offe, 1976:414-415; Habermas, 1970:102-103).

위기는 크게 두가지로 구별된다. 세계공황으로 나타난 경제적 위기와 계급갈등으로 나타난 정치적·사회적 위기가 그것이다. 첫번째 위기, 즉 시장경제의 결합으로 나타나는 경제적 위기들에 대해 국가는 이 이상 시장경제

의 자생력에 의존하지 않고 재정, 금융, 화폐, 과학, 테크놀로지 정책 등을 통해 시장경제에 깊숙히 개입하여 자본주의경제 전체를 정책적으로 조종해 가려고 한다. 이를 위해 위기진단, 예방, 처방의 기법들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또한 국가는 구조정책들을 통해 생산성이 저조한 영역으로 부터 높은 영역으로 자본, 인력, 자원이 이동해가도록 적극 유도한다. 이러한 국가개입의 양식을 그 이전의 수단적인 것과 구별하기 위해 오페는 이것을 국가의 “생산적” 기능이라 부른다(Offe, 1975a:134).

한편, 정치적·사회적 위기에 대한 국가의 대응책은 한 마디로 조직된 노동의 체제편입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집단은 대체로 자본주의 경제에 핵심적인 독점 및 공공영역들에 종사하고 있고, 실력을 장기적으로 행사할 경우 그 결과가 경제와 사회 전반에 심각하게 투영될 만큼 높은 위협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회안정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다양한 유인들을 통해 체제안으로 통합되어야 할 집단이다. 바로 이 위기회피와 체제생존의 논리로 인하여 공공복지정책의 최우선순위가 이 부문의 노동자들에게 주어졌다고 오페는 본다.⁽¹²⁾ 따라서 후기자본주의의 하나의 특징은 국가가 한편으로는 시장경제에 깊숙히 개입하여 경제적 위기를 관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복지국가의 실현을 통해 사회안정을 추구하는 데 있다고 할

(12) “제도화된 우선순위의 체계와 이것이 대변하는 새로운 정치개념”을 오페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정치행동의 한 유형으로서 위기에방의 메카니즘이 충분히 가동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변하는 전체체계에 대한 위협에 대해 이메카니즘이 상당한 신속성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극심한 위협이 있는듯이 보이는 문제영역들에 어느 때건 우선적으로 처방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또한 어떤 중요한 사회영역들이 위기상황에 빠졌을 때, 이 위기의 결과가 사회전체의 안정에 별다른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단순한 이유로 인해, 거의 국가개입이나 국가보조를 받을 가능성이 없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합리적 행정의 단순한 지침들로 부터 우리는 사회육구와 문제영역들에 관해 同心圓의인 우선순위의 체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체계에서는 개입의 원리나 요구가 무시될 때 이것의 결과가 안정의 기본조건들을 보다 심각히 위협하면 할수록 해당 문제영역에 부여될 우선순위는 높아진다. 반대로 주장이 무시된다 하더라도 위협한 결과가 일어나리라는(혹은 촉진될 수도 있다는) 믿음만한 사례를 제시할 수 없는 사회육구들은 국가행동영역의 주변에 자리잡게 된다. 이러한 구조적 메카니즘에 의해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영역과 육구체계 사이의 간격은 국가의 이용가능한 자원들이 보다 핵심적인 문제들, 예컨대 지속적인 자본실현의 전망을 보장한다든지 충분한 유효수요를 보장하는 일, 대외무역관계의 유지와 군부위기의 방지 혹은 국내갈등의 예방이나 진압에 보다 긴급히 필요하게 되면 될수록 더욱 커진다”(Offe, 1976:415-6).

수 있다.

후기자본주의의 다른 하나의 특징은 대중민주주의의 확립으로 인해 정치적인 것의 특수성이 분명해졌다는 점이다. 이것은 마샬과 벤딕스가 언급한 “시민권의 확대”와 깊이 관련된 것으로서(Marshall, 1963:65-122; Bendix, 1968:233-257), 사회이익집단, 특히 노동자계급의 투쟁에 의해 이들의 정치적 참여와 영향력이 크게 증가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국가권력은 공격적인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정당성의 기반을 국민의 신임에 두어야 한다. 여기서 국가는 한편으로는 자본주의경제를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운영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정당성의 확보를 위해 국민대중의 요구에 반응해야 되는데, 이 둘 사이에 기능적인 조화가 항상 있으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이 둘 사이의 단절과 마찰이 국가조직안에 들어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Habermas, 1975:68-75; Offe, 1973:213). 이것은 곧 시민사회 안에서 확립된 부르조아 지배가 곧장 국가지배에로 연장 된다는 마르크스의 전제와 국가기능은 결국 자본축적에 기능적인 것이 상이 아니라는 그의 발상에 대한 반증을 의미한다 하겠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에서 하버마스는 마르크스이론의 기본전제가 되고 있는 자본주의경제의 자율성과 국가의 수단이론에 대해 의문을 표시한다. 어느 대답에서 그는 말하기를 :

나의 분석을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적 분석과 구별시키는 것은 우리가 정치경제학 비판의 개념도구들을 사용할 경우, 스스로를 재생산해 내는 경제체계의 자율성을 여전히 전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있어, 경제체계의 법칙은 더 이상 마르크스가 분석했던 것과 동일한 것이 아니다(Habermas, 1979b: 168).

그는 「정당성의 위기」에서 그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보다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다.

정부활동들은 이제 경제체계를 직접 운행함으로써 위기를 회피해야겠다는 선언된 목표를 따르고 있으며, 이것의 결과로서 계급구조는 더 이상 비정치적 형태를 지니지 못하게 되었다. 이 이유들로 인해 계급구조는 이제 행정적으로 매개된 사회적 산물의 분배를 둘러싼 투쟁을 통해 유지되

어야만 한다. 계급구조는 따라서 정치적 논쟁들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과정은 더 이상 내재적으로 자기규제적인 경제체계의 운동인양 인식될 수는 없는 일이다. 가치의 법칙이 교환과정의 2중성격(체계의 운행과정인면서 동시에 착취과정)을 표현하는 것은 오직 계급지배가 비정치적으로 행사될 때 뿐이다. 이러한 조건들은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서 대략 충족될 수 있었을 뿐이다. 오늘날의 상황에서 권력이 어떻게 어느 정도 행사되고 있으며, 착취가 어떻게 어느 정도 경제과정을 통해 확보되는가의 문제는 더 이상 자율적인 노동시장의 메카니즘에 의해 사전에 규정될 수 없는 구체적인 권력관계에 의존한다. 오늘날 국가가 채워야 하는 기능은 생산양식의 존속에 필요한 조건들에 준거하여 설명될 수도 없고, 자본의 내재적 운동으로부터 노출될 수도 없다. 자본의 운동은 가치이론으로 파악될 수 있는 시장 메카니즘을 통해 더 이상 실현되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효율적인 경제적 추진력과 이에 대한 정치적 대응통제력의 결과인 것이다(Habermas, 1975:52-53).

결론적으로 하버마스의 입장은 마르크스에 의해 전제되었던 자본축적과정의 자율성과 국가에 대한 수단이론적 접근의 가정들을 거부하고, 국가와 경제의 관계를 후기자본주의의 경험에 비추어 재구성해야 된다는 테로 모아진다 하겠다.

(2) 자본주의 국가의 기본성격

이러한 하버마스의 반론에 대해 정통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증가된 국가개입이 자본의 논리를 초월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로 그 안에 예속되어 있음을 강조된다. 이들은 우리가 앞서 본 엥겔스의 국가개념을 더욱 발전시켜 국가의 역할이 그동안 비약적으로 확대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이것이 자본주의적 성격을 벗어나게 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바로 이 이유로 해서 이들은 국가의 위기관리기능이 위기의 진정한 극복을 가능케 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단순히 행정적으로 일시 유예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며, 때문에 결국은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한다. 경험적인 한 예로 종종 제시되는 것이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다. 이들은 이러한 근거에서 국가의 복지정책도 자본의 유통과 소비의 일면으로 취급한다.⁽¹³⁾

(13) 이러한 노선의 주장이 가장 분명히 드러난 텍스트로는 Altvater(1973), Müller

국가의 자본주의적 성격에 초점을 맞추는 이들의 논의가 진연 쓸모없는 것은 물론 아니다. 오히려 이 성격의 보다 분석적인 파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하버마스는 가치이론이 너무 무분별하게 확대되어 적용될 때, 문제가 해결되기 보다는 오히려 더욱 혼란에 빠지기 쉽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될 경우, 국가는 사회형성의 토대로 간주된 자본의 운동에 기능적일 수 밖에 없는, 어느 의미에서 완전한 행정국가와 같은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치적인 것의 특수한 의미, 다시 말해 국가권력의 정당성은 국민의 신임에 있으며,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사회집단들의 요구가 공공정책에 반영된다는 점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기 쉽다.

자본주의국가의 기본성격을 규명하려는 하버마스의 논의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추론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① 자본주의경제는 오늘날 더 이상 시장 메카니즘의 자율성에 의해서만 유지되지 않고, 증가된 국가개입의 전제조건위에서 이루어 진다.

② 국가는 더 이상 부르조아 헤게모니의 연속으로 파악될 수 없는 주기적인 권력투쟁의 장이 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정당성의 기반이 국민의 신임에 있기 때문이다.

③ 자본주의경제의 관리자요 운행자요의 국가가 갈수록 권력투쟁의 표적이 됨으로서 이는 필연적으로 자본주의경제의 정치화를 초래한다. 즉, 자본주의경제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의 문제 자체가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구적인 전체자본가의 관점을 대변하는 국가로서의 자본주의국가라는 관점에는 우리가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통찰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설사 국가의 담당체력이 바뀌어진다고 하더라도 국가기능은 이것이 자본주의적의 것으로 존속하는 한, 그 실체에 있어서 자본의 제약을 뛰어넘을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Offe, 1972; Altvater, 1973). 이것은 예컨대 자본이 행사할 수 있는 "투자파업"과 같은 특권이 남아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가재정이 근원적으로 자본주의경제에 의존하고 있어 후자의 성공적인 운영이 국가자체를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Offe, 1972:67). 뿐만 아니라 원만한 경제운영이 정

& Neusüß(1971)를 들 수 있다. Holloway & Piccivotto(1978)는 비슷한 논쟁의 논쟁들을 한데 엮어놓고 있다.

당성의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오페는 이러한 점들에 착안하여 자본축적과의 관계하에서 자본주의 국가의 기본특성을 네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이들은 배제성, 관리성, 의존성, 정당성으로 표현된다(Offe, 1975a:125-127). 배제성은 국가는 기본적으로 이출의 생산활동들로부터 제외되어야 하고 이런 활동들은 당연히 민간부분에 윤창로 돌려져야 한다는 자본주의의 기본원칙을 의미한다. 관리성은 앞에서 논한 의미의 “생산적” 활동들을 통해 국가가 시장경제에 개입하여 자본주의경제 전체를 관리하고 운행해야될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의존성은 국가의 재원이 경제과정으로부터 추출되는 세금에 근거하고 있는 한, 국가활동의 재정기반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어느 세력이 국가를 담당하든 간에 이들이 자본주의 경제를 부정하지 않는 한, 이것의 성공적인 운영에 최대의 관심을 쏟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당성이 의미하는 것은 국가는 이러한 자본주의적 성격을 은폐하고 공공이익의 대변자로 자신을 부각시킴으로써만 비로소 정당성을 확보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오페의 논의는 자본주의 국가의 자본주의적 성격을 보다 분석적으로 정돈 하려는 것이지만 이것은 동전의 한 면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후기자본주의 국가에는 아직도 압도적인 자본주의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이미 반 자본주의적 요소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자본가의 국가”라는 엥겔스 이래의 국가개념이 기능론적으로만 발전된다면 그 결과가 사뭇 일면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특히 오페는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질서의 맹아가 후기자본주의 국가안에 잉태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단적으로 말하여 삶의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로 요약된다. 말하자면,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교환가치에 입각한 노동의 상품화, 삶의 상품화로 특징되는 데 반하여, 국가의 공공복지 개념은 사용가치에 입각한 인간다운 삶의 가치와 필요를 중시한다는 것이다(Offe, 1975b:253-257). 후기자본주의 국가를 단순히 자본주의적이라고 못박아 버릴 수 없는 이유는 자본주의적 교환관계와 반대되는 탈상품화의 경향들이 국가기능안에 들어와 있고, 상품화와 탈상품화의 대립이 시장경제의 논리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둘러싼 권력투쟁에 의존하기 때문이다(Habermas, 1975:68-71).

하버마스가 위기전환의 다양한 차원들을 구별해 보면서 정당성위기의 특수

성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유물론적 환원주의의 위험을 피해 가기 위해서이다 (Habermas, 1975:Chap. 4-7). 그는 모든 것을 가치이론으로 설명하려 하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분석모델을 거부하며 국가개입으로 인해 경제적 위기가 행정위기로 전환될 수 있고, 또 이것이 다시 정당성 위기와 동기부여의 위기로 전환될 수 있다고 논한다. 하버마스는 따라서 정치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을 자본축적의 논리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들을 환원적으로 이 논리에 예측시키는 것도 반대한다. 오히려 그는 이들 간의 복잡한 관계를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각각의 특수성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결국 하버마스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위에서 본 앵겔스의 국가개념이 자칫하면 기능주의적 국가개념의 함정에 빠질 위험이 크다는 것과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경제, 정치, 문화사이의 상호작용을 불러일으키는 복합적인 체계들”의 규명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이다(Habermas, 1979b:168). 어느 경우이든, 그는 이론의 수준에서 정치와 문화를 경제에 수단적인 것으로 선험적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자본주의경제와 기능적으로 양립하기 힘든 모순들이 이들 영역 안에서 독자적으로 성장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하버마스의 논의는 마르크스의 이론에 버금가는 후기자본주의 이론을 지향해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 대안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하버마스에서 발견되는 대안적 이론의 구상은, 특히 그의 최신저술들을 볼 때(Habermas, 1979a, 1981), 마르크스와 앵겔스의 이론에 대한 실질적인 수정을 전제하고 있는듯이 보인다.

(3) 해방적 실천의 인식론적 기반

마지막으로 마르크스의 실천론에 대한 하버마스의 비판적 관점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자. 이에 관해서도 논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겠는데, 하나는 경험과학적인 수준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식론적 성격의 것이다.

경험과학적 수준의 논의는 계급갈등이 오늘날의 변화된 상황에서도, 마르크스가 확신했듯이, 역사의 추진력으로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로 집중된다.

하버마스의 대답은 후기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갈등은 현재화되기 보다 잠재화되는 측면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계급갈등의 제도화”라는 산업사회이론가들의 발상과는 사뭇 다른 것이지만,⁽¹⁴⁾ 그럼에도 계급갈등이 사회변동의 추진력으로서의 지위를 크게 상실하였다는 판단에서는 서로 비슷한 면이 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버마스는 마르크스의 전통을 따르면서도 그에게 비판적인 그의 독특한 면모를 여기서도 여실히 보여준다. 그에 의하면, 마르크스가 혁명의 조건으로서 당연시했던 요인들이 후기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Habermas, 1973b:70-86). 한 예로, 가치의 법칙을 따라 더욱 심화되리라고 여겨졌던 자본주의경제의 모순은 오늘날 국가의 경제개입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행정적으로 억제되고 통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는 것이다. 물론 경제위기가 이런 방식으로 무한정 연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지만, 국가개입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계속되는 한, 체제를 파멸시키는 경제위기는 유예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의 혁명조건으로서 마르크스는 이데올로기적 통합력에 균열이 일어나 이것이 노동자의 정치적 조직을 한결 용이하게 해준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하버마스는 이데올로기적 통합력이 오늘날 그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화되었음에 주목한다.

자본주의의 적응능력은 매우 강한 것이다. 그리고 놀라운만큼 신속성이 큰 것이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자본주의의 적응과정에 문화적, 동기적 차원의 비축자원들이 지금까지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져 왔다는 것이다. 사회통합의 다양한 형태들을 한데 엮어 이들을 사용한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다. 어찌됐건, 이것이 바로 프랑크푸르트 이론가들이 1930년대에 가졌던 발상이다. 그들이 미국에 갔을 때, 설명되어져야 할 것은 위기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주의의 통합능력, 특히 문화적 통합의 기제들임을 알게 되었다. 나는 오늘날도 이러한 문제가 매우 큰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Habermas, 1979b:167).

(14) 계급갈등의 제도화라는 문제에 관하여 산업사회이론가들과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견해 차이를 간결하게 정돈하고 있는 저술로는 Giddens(1982: 제 2 장)를 참조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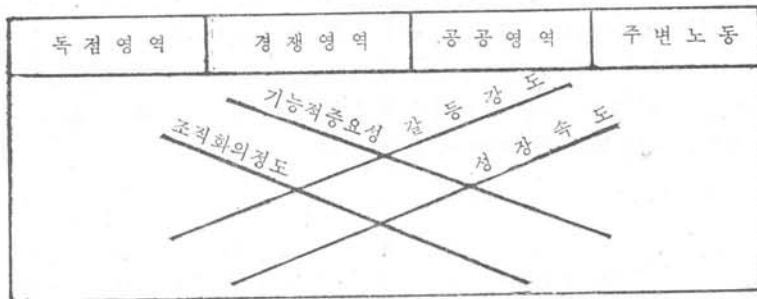
이데올로기적 왜곡의 상태에서는 계급갈등이 큰 제약에 부딪치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의 욕구와 주장을 해석하는 틀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모순이나 계급관계가 행동의 차원으로 매개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버마스의 말대로, “주장과 의도의 양립불가능성이 참여자들에 의해 인식되지 않는 한, 갈등은 잠재적인 상태에 머문다”(Habermas, 1975:27).

이러한 문제의식의 맥락에서 우리는 갈등의 사회공간이 오늘날 체제의 중앙부위로 부터 주변부위로 이동하게 된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본 국가개입의 우선순위와 계급유관적 선택성의 결과로 인해, 중앙부위의 조직된 노동은 체제에 편입되어 갈등능력을 현저히 상실한데 반해, 주변부위에서는 갈등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되고 있는 것이다.⁽¹⁵⁾ 요컨대, 경험과학적으로 볼 때, 후기자본주의의 특성의 하나는 마르크스가 기대했듯이 혁명의 물결이 중앙부위로부터 주변으로 파급되는 것이 아니고, 자체만으로는 도저히 혁명을 이끌어 갈 수 없는 주변집단들에서 강도높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데 있다.

바로 이 점에 관련하여 우리는 마르크스에 대한 하버마스의 인식론적 비판의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 갈등이 단순히 주변부위에 머물지 않고 중앙부위로 이행해 가려면 어떤 이론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인가? 하버마스의 결론은, 단적으로 말하여, 정치경제학적 비판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결코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보다 더욱 이데올로기적 통합을 유지시켜 주는 왜곡된 의사소통구조에 대한 철저한 비판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Habermas, 1971).

마르크스이론은 따라서 의문스러운 전제 위에서 있는 측면에 못지않게 또

(15) 참고로 Offe(1973:204)가 제시하는 영역별 갈등강도의 이행모델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한 채워져야 할 빈터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마르크스는 정치경제학의 비판에 사용될 개념도구들을 발전시키는 데는 탁월했지만, 왜곡된 의사소통구조의 비판에 사용될 개념도구들은 거의 개발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버마스가 구상하는 비판이론의 중심과제는 여하히 정치경제학 비판을 현대화시킬 것인가의 정통노선으로 부터 일탈하여, 여하히 이 테올로기비판의 프로그램을 사회이론으로 확립할 것인가에로 모아지게 되었다.

이 입장은 물론 비판이론을 보는 하나의 시각을 대변하는 것으로서 정치경제학 비판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하버마스 특유의 논리전개에서 인어진 하나의 중요한 결론은 마르크스에서 초보적인 것으로 남아있던 이테올로기비판의 프로그램을 자체의 내적 논리에 충실하게 재구성해본 결과 이테올로기 비판은 불가피하게 강제와 왜곡이 극복된 자유로운 대화의 가능성을 지향해가는 활동임이 분명해졌다는 것이다. 정치적인 차원으로 연결시키자면, 이것은 단순히 경제구조의 합리화를 지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강제와 억압으로 부터 해방되어 가는, 다시 말해 권력의 민주화를 지향해가는 지적활동이라는 것이다.

하버마스는 마르크스가 이테올로기 비판을 실제로 수행하면서도 이것의 의미와 철학적 기반을 인식론적으로 규명하는데 실패함으로써 대안적 사회에 대한 비존의 구상에 있어서 노동의 합리화와 권력의 민주화를 분명히 구별해 볼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치 못하고 오히려 이들을 혼동했다고 비판한다.

마르크스의 저술들을 보면 그가 행한 연구활동과 이에 대한 제한된 철학적 자기인식 사이에 묘한 불일치 현상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 마르크스는 그의 경험적 분석에서 인류의 역사를 물질적 활동과 이테올로기의 비판적 해체라는 범주에서 파악한다. 즉, 수단적 행동과 혁명적 실천, 노동과 자기성찰을 동시에 분석한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오직 노동을 통한 성찰이라고 하는 매우 제한된 개념 안에서 그가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을 해석하고 있다. 유물론적 종합의 개념이 충분히 포괄적으로 인식되지 못함으로써 마르크스가 진실로 급진적인 지식비판에 공헌할 수 있는 길이 제대로 개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심지어 마르크스로 하여금 그 자신이 실제로 취한 접근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까지 하였다. (Habermas, 1971:42)

다른 곳에서 하버마스는 쓰기를 :

『독일 이데올로기』의 첫 부분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마르크스가 의사소통의 상호작용과 노동의 상호관계를 개선하기보다, 그 반대로 사회적 실천이라는 막연한 칭호 아래 하나를 다른 하나에로, 다시 말해 의사소통의 행동을 수단적 행동으로 축소시켜 버렸음이 드러난다. 예나의 정신철학에서 도구의 사용이 노동주체와 자연대상 사이를 매개해 주듯이 마르크스에게는 수단적 행동, 즉 인간과 자연환경의 물질적 상호교환을 규제하는 생산활동이 모든 범주들의 생성의 파라다임이 된다. 이리하여 모든 것들이 생산의 자기 운동 안으로 포함되어져 버리는 것이다. 바로 이 이유로 인해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변증법적 관계에 관한 마르크스의 탁월한 해안이 매우 간단히 경제주의적 방식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었던 것이다 (Habermas, 1973a:168-169).

하버마스의 대안은 노동의 범주와 상호작용의 범주를 환원될 수 없는 인식론적인 범주로 확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구성은 노동의 합리화가 곧 장 지배관계의 합리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통찰에 근거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하버마스가 썼듯이, “인간생활을 보다 편안하게 유지시켜 주는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조건들의 기술적 통제가 설사 마르크스의 생각에 공산주의적 발전단계에 해당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자동적으로 18세기의 계몽주의자들과 19세기의 청년 헤겔주의자들이 의도했던 류의 사회적 해방에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Habermas, 1970:58).

결국, 하버마스는 마르크스가 비판이론의 기본범주들을 해명하는 데 실패했거나 애매한 상태로 남겨 놓음으로써 많은 인식론적 혼돈을 야기시킬 소지를 남겨 놓았다고 본다. 이것은 단순한 인식론적 혼동일 뿐 아니라, 경제주의적으로 잘못 해석된 이론의 틀 안에서 실천이 조직될 때, 이것의 실제적 결과는 파국적일 수도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데올로기 비판에 내재된 지배관계의 민주화가 체계적으로 희생되면서 생산관계의 합리화가 기술관료적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버마스의 다음과 같은 논의는 이 점을 잘 보여준다 :

사회생활의 재생산은 오늘날 사용가치의 생산과정으로서 합리적으로 계획될 수 있다. 이 과정은 기술적 통제 하에서 이루어지지만, 관련된 개인들의 의지와 통찰에 따라 민주적으로 통제될 수도 있다. 여기서 마르크스

는 정치적 공중의 실천적 통찰과 성공적인 기술적 통제를 일치시킨다. 그러나 관료계획체계가 상품과 용역의 생산을 과학적으로 썩 잘 통제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해방된 사회의 즐거움과 자유를 실현시키는데 충분한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 마르크스는 어느 수준에서건 물질적 조건의 과학적 통제와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사이에 간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이것이 왜 사회주의자들이 사회적 부는 상대적으로 보장되지만, 정치적 자유는 제외되어 버리는 권위주의적 복지국가를 전연 예상하지 못하였는가에 대한 철학적 이유이다 (Habermas, 1970:57-58).

결국, 하버마스는 마르크스 이론에 근거한 해방적 실천의 결과가 소련의 독재체제로 나타나게 된 것은 단순한 역사적 우연이 아니고,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마르크스 이론 안에 있다고 결론짓는다.⁽¹⁶⁾ 그 이유는 철학적으로 보면 노동과 상호작용의 범주들이 인식론적으로 구별되지 못한 데 있지만, 보다 사회과학적으로 보면, 권력의 민주화, 일상생활의 민주화를 겨냥하는 개념도구들이 마르크스 이론 안에 개발되어 있지 못한 데 있다(Wellmer, 1971). 이러한 이론적 결함 위에서 마르크스주의적 실천이 제도화될 때, 이것은 쉽게 기술관료적 통제와 연합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이때 마르크스주의는 새로운 권력관계를 은폐하고 이것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일종의 이데올로기로 변하게 된다(Negt, 1969).

하버마스가 지금까지 취해 온 이론구성의 전략은 이러한 마르크스주의의 결함을 언어이론의 적극적 수용을 통해 극복하려는 의도를 보인다. 의사소통이론을 사회이론으로 구성하려는 이 작업은 사실 매우 방대하고 미개척의 것으로서 아직 미완성의 상태에 남아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이데올로기 비판의 프로그램을 철학적 기반으로부터 단단하게 다지려는 의도는 분명한 듯이 보인다. 이러한 시도는 물론 순수하게 이론적인 것이지만, 정치적 목표에 있어서는 권력의 민주화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바로 이 점에서 하버마스의 비판이론은 마르크스 이론으로 부터 출발하면서도 이론과 실천에 있어서 이것의 한계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인다고 하겠다(Han, 1981).

(16) 이 면에서 하버마스는 소련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초기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적 관점—에컨데 마르크제 등에 의해 분명히 제기되었던 비판—을 계승하여 이것을 인식론적으로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Adorno, T.W.
1973 *Negative Dialectics*, New York, Seabury.
- Althusser, Louis
1969 *For Marx*, New York, Vintage Books.
- Althusser, Louis & E. Balibar
1970 *Reading Capital*, London, NLB.
- Altvater, E
1973 "Zu einigen Problemen des 'Krisenmanagement' in der kapitalistischen Gesellschaft," M. Jänicke (ed.), *Herrschaft und Krise*, Westdeutscher Verlag: 170-196.
- Anderson, Perry
1976 *Considerations on Western Marxism*, London, NLB.
- Bendix, Reinhardt
1968 "The Extension of Citizenship to the Lower Class," Bendix(ed.), *State and Society*,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233-257.
- Bourdieu, Pierre
1977 *Outline of A Theory of Practice*,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Connerton, Paul(ed.)
1976 *Critical Sociology*, New York, Penguin
- Engels, Friedrich
1957 *Anti-Dühring*, MEW Bdzo, Berlin.
1972 *The Origin of the Family, Private Property and State*, London, Lawrence & Wishart.
- Giddens, Anthony
1979 *Central Problems in Social Theory*, London.
1982 *Sociology*, London, Macmillan.
- Godelier, Maurice
1972 *Rationality and Irrationality in Economics*, New York, Monthly Review.
- Habermas, Jürgen
1970 *Toward a Rational Society*, Boston, Beacon.
1971 *Knowledge and Human Interests*, Boston, Beacon.
1973a *Theory and Practice*, Boston, Beacon.
1973b "Über einige Bedingungen der Revolutionierung spätkapitalistischer Gesellschaften," *Kultur und Kritik*, Suhrkamp: 70-86.
1975 *Legitimation Crisis*, Boston, Beacon.
1976 *Rekonstruktion des historischen Materialismus*, Suhrkamp.

- 1977a *Communication and the Evolution of Society*, Boston, Beacon.
- 1977b "Interview," *Telos* 39 (Spring): 163-172.
- 1981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Suhrkamp.
- Han, Sang-Jin
- 1979 "Ideology-Critique and Social Science" S. McNall (ed.), *Theoretical Perspectives in Sociology*, New York, St. Martin's Press: 292-309.
- 1981 "The Logic of Social Formations: Toward a Synthesis of Althusser, Foucault, Offe and Habermas," *Current Perspectives in Social Theory* 1: 161-192.
- Held, David
- 1980 *Introduction to Critical Theory*, London, Hutchinson.
- Hindess, Barry
- 1977 *Philosophy and Methodology in the Social Sciences*, New Jersey, Humanities Press.
- Holloway, J. & S. Picciotto (eds.)
- 1978 *State and Capital*, London, Edward Arnold.
- Horkheimer, Max
- 1972 *Critical Theory*, New York, Harper & Low.
- Jay, Martin
- 1973 *The Dialectical Imagination*, Boston, Little Brown.
- Jäggi, Urs
- 1976 *Theoretische Probleme eines Strukturellen Marxismus*, Suhrkamp.
- Larrain, Jorge
- 1979 *The Concept of Ideology*, London, Hutchinson.
- Lenin, V.
- 1951 "The State," Lenin et al. (ed.), *Soviet Legal Philosophy*,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15.
- Marcuse, Herbert
- 1964 *One-Dimensional Man*, Boston, Beacon.
- Marshall, T.H.
- 1963 *Class, Citizenship and Social Development*, Connecticut, Greenwood Press.
- Marx, Karl
- 1967 *Capital* 3,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 1970a *Introduction to a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reprinted in Marx & Engels (1970): 124-151.
- 1970b "Preface," to *A Contribution to the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New York.
- 1972 *The Eighteenth Brumaire of Louis Bonaparte*, London.
- 1973 *Grundrisse*, London, Penguin
- 1976 *Capital* 1, London, Penguin

Marx, Karl & F. Engels

1970 *The German Ideology*, London, Lawrence & Wishart.

McCarthy, Thomas

1978 *The Critical Theory of Jürgen Habermas*, Cambridge, MIT Press.

Merton, Robert

1968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New York, Free Press.

Miliband, Ralf

1969 *The State in Capitalist State*, New York, Basic Books.

Müller, W. & Chr. Neusüß

1971 "Die Sozialstaatsillusion und der Widerspruch von Lohnarbeit und Kapital," *Probleme des Klassenkampf* 20: 7ff.

Negt, Oskar

1969 "Marxismus als Legitimationswissenschaft," A. Deborin & N. Bucharin, (eds.) *Kontroversen über dialektischen und mechanistischen Materialismus*, Frankfurt: 7-50.

Offe, Claus

1972 *Strukturprobleme des kapitalistischen Staates*, Suhrkamp.

1973 "Krisen des Krisenmanagement," M. Jänicke (ed.), *Herrschaft und Krise*, Westedutscher Verlag: 197-223.

1974 "Structural Problems of the Capitalist State," *German Political Studies* 1, London, Sage Publications, 31-57.

1975a "The Theory of the Capitalist State and the Problem of Policy Formation," L. Lindberg et al., (eds.), *Stress and Contradiction in Modern Capitalism*, MA, Lexington Books: 125-144.

1975b "Introduction to part III," in Linde et al., (eds.): 245-260.

1976 "Political Authority and Class Structures," P. Connerton (ed.), *Critical Sociology*, New York, Penguin: 388-421.

Pashukanis, Evgeny

1978 *Law and Marxism*, London.

Poulanzas, Nicos,

1969 "The Problem of the Capitalist State," *New Left Review* 58.

1975 *Political Power and Social Classes*, London, NLB.

1976 "The Capitalist State: A Reply to Miliband and Laclau," *New Left Review* 95.

Schmidt, Alfred

1968 "Zum Erkenntnisbegriff de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Eucher & Schmidt (eds.),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heute 100 Jahre 'Kiapital'*, Frankfurt: 30-42.

1972 *Geschichte und Struktur*. München.

Schroyer, Trent

1973 *The Critique of Domination*, Boston, Beacon.

Sensat, Julius

1979 *Habermas and Marxism: An Appraisal*, London, Sage Publications.

Slater, Phil

1977 *The Origin and Significance of the Frankfurt School*.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Tar, Zoltan

1977 *The Frankfurt School*, New York, John Wiley.

Therborn, Göran

1977 "The Frankfurt School," *Western Marxism: A Critical Reader*, London: 83-139.

Thompson, John & D. Held (eds.),

1982 *Habermas: Critical Debates*, London, Macmillan.

Touraine, Alaine

1977 *The Self-Production of Society*,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Wellmer, Albrecht

1971 *Critical Theory of Society*, New York, Seabury.

Wright, Erik Olin

1978 *Class, Crisis, and The State*, London, NLB.